

“연내 종전선언·완전한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 ① 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 ②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 ③ 문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 ④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
- ⑤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으로
- ⑥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⑦ 8·15 이산가족 상봉
- ⑧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화장한 봄날인 4월 27일,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추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답방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 따르면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

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달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5월 중에는 정상급 군사회담도 열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에 합의한데 이어 8·15 광복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에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이끈 시 일 안에 개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선언문 발표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귀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깃줄과 역사, 문화와 언어를 가진 북남은 본래처럼 하나가 돼 끝없는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임동욱 기자